IMPACT CONNECTOR · WEEKLY INTELLIGENCE BRIEFING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목차

This Week Point 3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4

1조 7,600억 달러의 시장, 자산의 93%는 투자자 4분의 1이 쥐고 있다 — 성장이 꺾인 자리에서 나온 '효과' 질문, 그리고 '임팩트 정렬' 1%의 스페인 4

공익을 약속한 회사가 증시에 오를 때 — 상장 서류가 드러낸 공익법인·신탁·창업자 주식의 3층 구조, 그리고 100곳을 넘긴 일본의 B 코프 7

같은 전기, 다른 계산 — 엄격한 스코프2 규칙을 미룬 GHG 프로토콜, 해외 인증서의 문을 닫은 싱가포르, 그리고 자연 공시와 EU 역외 기업 공시에서 이어진 줄다리기 10

그린워싱은 전환 산업을 따라간다 — 1,594개 기업, 기후를 처음 앞지른 생물다양성, '그린'을 이름에서 지운 루프트한자 12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15

책임은 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 연무의 책임을 증시와 은행에 묻는 싱가포르, 은행의 탄광 금융을 OECD에 올린 교회들, 그리고 '구매 조건'을 보라는 투자자 15

결과에 값을 매기는 돈 — 상환이 공공계약에 걸린 1억 달러 대출 펀드, 1유로가 4.30유로가 된 재단의 25년 결산, 그리고 맥아더의 촉매 자본이 간 두 곳 17

개발금융이 '단순하게'를 약속했다 — 방콕 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세 가지 결론, 104억 달러를 모은 TPG 기후 펀드, 그리고 신흥국 여성에게 가는 두 갈래의 돈 19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21

기본법 시행 다섯 달 앞, 가장 큰 광역정부가 전담국을 없앤다 —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안과 목적사업비 0원의 사회적경제원 21

의무공시를 앞둔 한국 기업의 기후 장부 — 한전의 72조 8,000억 원과 SK㈜의 7억 9,300만 원, 그리고 협력사로 내려가는 자료 요청 24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26

05 이번 호 전망 27

06 지난 전망 점검 27

07 편집장의 글 28

① 약속을 지키게 하는 장치의 값 28

② 같은 숫자를 다른 자로 재는 시대 28

③ 법이 생긴 뒤의 첫 겨울 28

THIS WEEK POINT

임팩트 시장은 커졌는데, 그 돈은 소수의 손에 있다.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가 집계한 세계 임팩트 투자 운용자산은 2025년 말 1조 7,600억 달러로 2년 전보다 12% 늘었다. 그러나 연평균 성장률은 2019~2024년 21%에서 6%로 내려왔고, 운용자산 5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자가 응답자의 28%이면서 운용자산의 93%를 쥐고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된 2,714억 유로 가운데 '임팩트에 정렬된' 몫이 1%였다. 규모의 시대가 끝나고 '효과'를 묻는 시대가 왔다는 진단이 업계 안에서 나왔다.

공익을 약속한 회사들이 증시에 오른다. 앤트로픽의 상장 서류는 공익법인이라는 법적 형태, 이사 7명 중 4명을 뽑는 장기공익신탁, 창업자에게 의결권 50.1%를 주는 특별 주식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같은 서류는 신탁의 권한이 정관이 아니라 계약에 근거하며 주주 초다수 결의로 바꿀 수 있다고 적었다. 일본에서는 B 코프가 10년 만에 100곳을 넘었지만 소비자 인지율은 약 10%였다. 공익의 약속을 누가, 무엇으로 지키느냐가 이번 주의 질문이었다.

같은 전기를 두고 계산법이 갈라졌다. 온실가스 회계 기준 GHG 프로토콜은 재생에너지 구매를 시간·장소 단위로 맞추라는 새 규칙에 기업 82%가 반대하자 의무 적용을 미뤘다. 같은 주 싱가포르는 자국 전력망에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해외 재생에너지 인증서로는 재생전력 사용을 주장할 수 없게 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다섯 달 앞에서 전담국 폐지와 관련 예산 56.5% 삭감안을 냈다. 규칙을 느슨하게 할지 단단하게 할지의 선택이 기업·정부·자본 모두에게 동시에 왔다.

🔒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약속의 크기보다 약속을 지키는 장치를 묻기 시작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주 꼭지들은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장부에 던진다. 1조 7,600억 달러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가, 공익법인의 사명은 상장 뒤에도 강제되는가, 재생전력 100%라는 숫자는 어느 전력망에서 나온 것인가, 법이 지방정부에 책무를 주는데 지방정부는 전담 조직을 지키는가. 숫자와 선언은 이미 충분히 쌓였다. 시장과 감독기관, 시민사회가 지금 확인하려는 것은 그 숫자와 선언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 — 계약인지 법인지, 연간 평균인지 시간 단위인지, 조례인지 예산인지 — 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약속을 구조로 묶어 둔 조직이다. 재단 소유로 사명을 정관에 박은 기업, 시간 단위 재생전력 계약을 이미 맺어 둔 기업, 성과를 상환 조건에 넣은 투자자가 그렇다. 불리해지는 쪽은 약속의 크기로 신뢰를 산 조직이다.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계약에 사명을 맡긴 회사, 해외 인증서로 숫자를 채운 기업, 법이 생긴 뒤에 전담 조직을 없애는 정부는 같은 질문 앞에 선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에는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과 2028년 첫 지속가능성 의무공시라는 두 개의 날짜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지금 하위 규정을 만드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보다 '약속을 어떤 단위로 기록하고 누가 확인하게 할 것인가'를 정할 때다. 기업은 재생전력 구매를 연간 총량이 아니라 계약별·월별로 정리해 두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지원 기관이 바뀌어도 이어질 성과 기록을 스스로 갖추는 일부터 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장치를 강조하면 장치를 만들 여력이 없는 작은 조직이 먼저 밀려난다. GIIN 조사에서 운용자산 1억 달러 미만 투자자는 응답자의 40%이지만 자산의 1%만 운용했고, 독일의 유기농 면화 협동조합들은 인증 비용이 세 배로 뛰자 인증을 포기하고 있다. 확인 장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과 그 비용을 함께 나누는 일은 같이 설계해야 한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1조 7,600억 달러의 시장, 자산의 93%는 투자자 4분의 1이 쥐고 있다 — 성장이 꺾인 자리에서 나온 '효과' 질문, 그리고 '임팩트 정렬' 1%의 스페인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가 격년으로 내는 시장 규모 보고서가 28일 나왔다. 2025년 12월 기준 세계 임팩트 투자 운용자산은 약 3,000개 조직에 걸쳐 1조 7,600억 달러로, 2024년 집계(1조 5,700억 달러)보다 12% 늘었다. 증가 자체는 이어졌지만 속도는 크게 줄었다. 2022~2024년 35% 늘었던 시장이 이번에는 12%에 그쳤고, 연평균 성장률은 2019~2024년 21%에서 2024~2026년 6%로 내려왔다. 보고서는 이것을 후퇴가 아니라 "빠른 초기 확산에서 꾸준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으로 해석했다. 미국 임팩트 투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상장 시장의 가치 하락과 회수(엑시트) 부진으로 자산이 묶여 새 투자를 할 여유가 줄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더 눈에 띄는 숫자는 집중도다. 이번 조사에 응한 331개 투자자의 평균 임팩트 포트폴리오는 14억 달러이지만 중앙값은 1억 6,200만 달러다. 운용자산 5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자는 응답자의 28%이면서 전체 임팩트 운용자산의 93%를 갖고 있고, 1억 달러 미만 소형 투자자는 응답자의 40%이면서 1%만 운용한다. 기관투자자가 임팩트 자본의 35%를 대는 가장 큰 공급자가 됐다. 가족 자산운용사(패밀리오피스)는 자본의 6%에 불과하지만 조사 대상 펀드 운용사의 51%에 돈을 댔다. 큰돈은 성숙한 상장 기업으로, 작은 돈은 초기 기업으로 간다.

지역 편중도 여전하다. 북미·유럽 투자자가 운용자산의 92%를 차지하고, 응답자의 42%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그 지역으로 간 돈은 전체의 5%였다. 투자자의 80% 이상, 운용자산 기준 95%가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하며, 시장보다 낮은 수익을 감수하는 '양허성' 투자는 운용자산의 5%였다. 응답자의 84%는 임팩트 투자에 드는 비용을, 83%는 자산 소유자와 운용사 사이의 목표 불일치를 과제로 꼽았다. GIIN 경영진은 서문에서 "다음 장은 성장만으로 채울 수 없다"며 규모를 효과로 바꾸는 일이 남았다고 썼다.

같은 주 모건스탠리가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 기관투자자 900곳을 조사한 결과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자산 소유자의 82%, 운용사의 85%가 2년 안에 지속가능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절반가량은 그 증가율을 5% 이하로 예상했다. 언론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크게 걱정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34%에서 8%로 줄었고, 데이터의 가용성과 일관성을 크게 걱정한다는 응답은 47%에서 64%로 늘었다. 스페인지속가능투자포럼(Spainsif)이 27일 마드리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같은 문제를 국가 단위로 보여 준다.

2025년 스페인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으로 운용된 자산은 2,714억 7,000만 유로로 13.95% 늘었지만, 그 92%가 기본적인 ESG 전략이었고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전략은 5%, 임팩트에 정렬된 전략은 1%였다. 3주 전 이 지면은 스페인의 임팩트 투자 집행액이 2025년 32억 1,700만 유로로 2년 만에 두 배가 됐다는 스페인NAB 집계를 전했다. 두 집계는 재는 대상이 다르지만, 함께 놓으면 스페인의 '임팩트'가 전체 지속가능 투자 자산의 1~2% 규모라는 그림이 나온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2개 매체가 「GIIN·impact investing market」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시장 규모와 집중도 수치는 GIIN 보고서를 소개한 영국·미국 매체 본문에서, 기관투자자 조사는 국제 ESG 매체 본문에서, 스페인 수치는 스페인 사회책임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한국의 사회적금융 현장도 같은 질문을 작은 규모로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우리 임팩트 챌린지'는 22일 성과공유회에서 참여 기업 10곳의 전체 고용이 사업 전 146명에서 중간 집계 152명으로 6명, 취약계층 고용이 87명에서 89명으로 2명 늘었다고 공개했다. 숫자는 작지만, 사업이 끝나기 전에 중간 성과를 고용 인원 단위로 그대로 내놓은 것

은 GIIN이 말한 '효과'의 출발점과 같다.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이런 후원·지원 사업의 성과를 어떤 단위로 기록할지가 하위 규정의 쟁점이 된다. 지원 기관과 후원 기업은 지금부터 고용·매출·수혜자 수처럼 사업이 바뀌어도 이어 셀 수 있는 지표를 공통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다.

🔒

심층 — 커진 시장이 다음에 증명해야 할 것 (GIIN 2026 시장 보고서 · 모건스탠리 기관투자자 조사 · Spainsif 2026 보고서)

왜 지금 중요한가. 임팩트 투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방식이 큰 규모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힘을 썼다. 1조 7,600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 증명이 끝났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가 보여 주는 집중도와 지역 편중, 시장 수익률 중심의 구성은 이 돈의 대부분이 일반 투자와 비슷한 곳에 비슷한 방식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자자의 91%가 임팩트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그 만족의 기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단은 아직 약하다. 데이터 우려가 1년 새 47%에서 64%로 뛴 것도 그래서다. 다음 단계의 경쟁은 자금 규모가 아니라 '이 돈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를 보여 주는 능력에서 갈린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성과를 측정 단위까지 설계해 둔 운용사와, 큰 자산 소유자와 작은 현장 사이를 잇는 중개자다. 패밀리오피스가 자본의 6%로 운용사의 절반에 돈을 댄 것은 작은 돈이 새 운용사를 키우는 씨앗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이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투자자가 시장의 다양성을 지킨다. 불리해지는 쪽은 'ESG'와 '임팩트'를 같은 상품처럼 팔아 온 운용사다. 스페인 자료처럼 기본 ESG가 92%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감독기관과 고객이 '임팩트'라는 이름의 근거를 묻기 시작하면, 이름표와 실제 전략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에서 임팩트라는 이름을 단 자금은 정책 펀드와 은행 사회공헌 사업, 소수의 전문 운용사로 나뉘어 있고, 같은 단위로 집계한 시장 통계는 아직 없다.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집계의 틀을 정할 시점이다. 정부와 중간 지원 기관은 '임팩트 투자'와 '사회책임 투자', '사회공헌 지원'을 구분해 따로 세는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국내 시장의 집중도와 수혜 분포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작은 사업의 중간 성과를 그대로 공개하는 관행이 쌓이면 그것이 집계의 바탕이 된다.

놓치기 쉬운 함정. '효과'를 강조하는 흐름이 측정 비용을 작은 조직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GIIN 응답자의 84%가 이미 임팩트 투자의 비용을 과제로 꼽았다. 측정 요구가 늘수록 측정 인력을 갖춘 대형 투자자와 큰 피투자 기업만 유리해지고, 1%의

> 자산을 쥔 40%의 소형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수 있다. 측정은 공동 기준과 공동 도구로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어야 한다.

출처: Pioneers Post (영국, 2026-10) — Impact investments worldwide hit US$1.76tn as growth slows – GIIN report · ImpactAlpha (미국, 2026-10) — Chin up: Impact investing assets under management grow to $1.8 trillion · ESG Today (국제, 2026-10) — Over 80% of Institutional Investors Plan to Increase Allocations to Sustainable Investments: Survey · Diario Responsable (스페인, 2026-10) — La inversión sostenible crece en España, pero aún tiene pendiente transformar la economía real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우리은행, 사회연대경제기업 10곳 지원...전체 고용 6명, 취약계층 고용 2명 늘어

공익을 약속한 회사가 증시에 오를 때 — 상장 서류가 드러낸 공익법인·신탁·창업자 주식의 3층 구조, 그리고 100곳을 넘긴 일본의 B 코프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이번 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냈다. 이 회사는 2021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른 공익법인(PBC)으로 세워졌다. 공익법인은 주주 이익과 공익 목적을 함께 고려할 법적 의무를 지지만, 미국 회사법에서는 그 의무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없고 소송도 주주만 낼 수 있다.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는 이 점을 들어 "공익을 대신 말해 줄 사람이 없다"고 썼다. 이를 보완하려고 회사는 2023년 장기공익신탁을 만들었다. 이해관계가 없는 수탁자들이 특별 주식(T주)을 통해 이사 7명 중 4명을 뽑는 구조다. 다만 수탁자는 원래 5명이지만 지금은 4명이고, 임기는 1년이며, 후임은 현 수탁자들이 고른다. 네 번째 이사를 지명하거나 해임하려면 이사회 지명위원회의 동의나 직원 투표가 필요하다.

상장 서류는 여기에 새 층을 더했다. 창업자 7명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F주가 상장 뒤 핵심 결정에서 의결권 50.1%를 행사한다. 7명 중 과반이 합의하는 동안 유지되고, 회사에 남은 창업자가 3명 미만이 되면 이 구조는 해산된다. 그리고 서류는 주주 초다수가 동의하면 신탁의 동의 없이도 신탁 조건을 바꾸거나 T주의 권한을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상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적었다. 신탁의 권한은 정관이나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주 간 계약에 근거한다. 미국 매체는 덴마크의 칼스버그·노보 노디스크처럼 재단이 지배권을 영구적으로 갖는 '스튜어드 오너십'과 비교하며, 이 구조는 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돈의 약속도 함께 나왔다. 회사는 주식의 5%를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쓰는 '공익기금'에 넣고(주주 승인 조건), 창업자들은 보유 주식의 80%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회사는 직원 기부 매칭까지 합치면 약 20%가 공익에 쓰인다고 밝혔다. 미국 자선 전문 매체는 상장 기업가치를 1조 5,000억~2조 달러로 보는 전망에 따라 이 약속이 3,000억~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같은 서류는 80% 서약이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고, 공익기금은 민간 재단과 달리 연간 의무 지출이 없으며 회사가 배분처를 정한다.

보스턴대 법학 교수는 "모호한 것은 그러고 싶어서"라고 비판했고, 효과적자선센터 대표는 검증된 지역 단체를 놔두고 새로운 방식에 돈이 쏠릴 것을 걱정했다. 프랑스 지속가능 금융 매체는 같은 서류가 전력·물·지역 반대를 사업 위험으로 상세히 적으면서도 자사 활동의 환경 비용에는 말이 적다고 분석했다. 서류에 따르면 회사는 2026년 상반기 매출 160억 달러에 순손실 800억 달러를 냈고, 앞으로 10년 동안 5,180억 달러어치 컴퓨팅 용량 구매를 약정했다.

지난 호에 이 지면은 미국 콜로라도에 등록된 공익법인 3,000여 곳 가운데 정상 상태인 곳이 약 1,000곳이라는 뉴욕대 연구진의 집계를 전했다. 이번 주 일본에서는 반대 방향의 숫자가 나왔다. 비랩 일본 지부에 따르면 일본에 본사를 둔 B 코프는 2026년 7월 100곳에 이르렀고 9월 말에는 107곳이 됐다. 10년 전 약 15곳에서 시작해 최근 2년 동안 50곳이 늘었고, 22개 도도부현 46개 업종에 퍼졌다. 그러나 일본종합연구소 조사에서 B 코프 인지율은 약 10%로 영국(약 50%)의 5분의 1이었고, 인지 경로의 절반가량은 상품 포장이었다.

기념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인증 기업 수보다 금융·투자 기준과 주주 우선주의 같은 '시스템의 규칙'을 바꾸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B 코프도 개별 인증을 넘어 지역 단위로 묶이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비랩 스페인과 경영대학원 EADA, 제약사 페레르가 2022년 시작한 '바르셀로나+B'에 지금까지 167개 조직이 협력했고 600곳 넘는 기업이 고용 포용·학교 중도 이탈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 멕시코에서는 바하칼리포르니아의 와이너리 겸 리조트 엘시엘로가 포도밭·양조장·리조트 전체로 B 코프 인증을 받았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8개국 29개 매체가 「Anthropic·앤트로픽 IPO」 이야기를 다뤘고, 전체 기사량을 감안해도 직전 4주보다 약 2.9배 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7건이다. 지배구조 내용은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가 증권신고서를 분석한 본문에서, 공익 약속의 규모와 비판은 미국 자선 전문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매체 7건의 제목은 대부분 매출·인프라 각도였다.

> 한국 시사점 — 한국에는 공익법인과 같은 '공익 목적 회사' 형태가 상법에 없다.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일반 주식회사로 세워지고, 사명은 정관과 인증 요건에 기대고 있다. 2027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공시를 법에 넣었지만, 그 공시를 누가 확인하고 무엇이 달라지면 지위가 바뀌는지는 하위 규정에 남아 있다. 앤트로픽의 사례가 보여 주듯, 사명을 지키는 장치가 법이 아니라 계약에 있으면 지배 주주의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위 규정에서 정할 핵심은 공시의 항목 수보다, 공시 내용을 누가 확인하고 사회적 목적을 버린 조직의 지위를 어떤 절차로 바꾸는지다. 미국 공익법인처럼 '주주만 소송할 수 있는' 구조로 두면, 공익을 대신 말할 사람이 없는 문제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생긴다.

🔒

심층 — 사명은 정관에 있는가 계약에 있는가 (앤트로픽 증권신고서 · 장기공익신탁 · 일본 B 코프 100곳)

왜 지금 중요한가. 공익법인 형태는 20년 전 B 코프 운동이 구상한 아이디어이고, 미국 자선 전문 매체는 인공지능 대기업 두 곳이 이 형태를 택한 것을 그 운동의 승리로 평가했다. 그런데 상장은 이 형태가 가장 큰 압력을 받는 순간이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상장 뒤 15일 만에 주요 지수에 편입될 수 있어 연기금을 포함한 지수 추종 자금이 자동으로 주식을 사게 된다. 사명을 지키는 장치가 이 압력을 견디는지는 이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내건 기업 형태 전체가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버티는지를 보여 주는 시험이 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사명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묶어 둔 기업이다. 재단이 의결권 과반을 영구적으로 갖고 수익은 회사 안에 남게 하는 덴마크식 재단 소유 기업은 상장을 하더라도 사명이 지배구조에 박혀 있다. 일본의 B 코프들이 '규칙을 바꾸자'고 말한 것도 같은 방향이다. 불리해지는 쪽은 사명을 홍보 문구나 계약 조항에만 둔 기업이다. 투자자와 시민사회가 지배구조 문서를 직접 읽기 시작하면, '공익'이라는 이름과 실제 강제력의 차이가 평가 대상이 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소셜벤처에게 사명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상장보다 먼저 오는 후속 투자와 매각이다. 임팩트 투자자가 처음 들어갈 때는 사명이 투자 근거였지만, 일반 투자자가 다음 라운드를 주도하거나 회사가 팔리면 그 근거를 지킬 장치가 대개 없다. 그래서 타이밍은 첫 투자 계약이다. 투자자와 창업자는 첫 계약서에 사명 변경 시 임팩트 투자자의 동의권이나 회수 조건을 넣을지, 회사 정관의 목적 조항을 바꾸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한지를 함께 정할 수 있다. 이미 투자를 받은 회사도 오늘 정관과 주주 간 계약을 펼쳐 사명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일에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놓치기 쉬운 함정. 이 사례를 '선언은 다 거짓'이라는 결론으로 읽으면 안 된다. 미국 매체도 회사가 처음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지배구조 장치를 만든 것 자체는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장치의 존재가 아니라 강제력의 정도다. 또 공익 약속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의 작은 단체들이 그 돈을 기다리며 다른 재원을 놓칠 위험도 있다. 약속이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은 그 돈을 계획에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할 첫 항목이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IPO filing commits Anthropic PBC to the long-term benefit of humanity – for now ·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2026-10) — Anthropic's $300 billion promise leaves nonprofit leaders asking who decides and when · Novethic (프랑스, 2026-10) — Anthropic reconnait que les risques ESG menacent son modèle · Sustainable Brands Japan (일본, 2026-10) — 日本のB Corpが100社到達 10周年イベントでシステムチェンジの方策探る · Corresponsables (스페인, 2026-10) — Las B Corps impulsan ciudades más resilientes, habitables y preparadas para el futuro · ExpokNews (멕시코, 2026-10) — El Cielo Valle de Guadalupe Obtiene la Certificación de Empresa B para su vinícola, viñedos y resort

같은 전기, 다른 계산 — 엄격한 스코프2 규칙을 미룬 GHG 프로토콜, 해외 인증서의 문을 닫은 싱가포르, 그리고 자연 공시와 EU 역외 기업 공시에서 이어진 줄다리기

기업이 산 전기의 배출량(스코프2)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이번 주 두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정해졌다. 세계 대부분 기업이 쓰는 온실가스 회계 기준을 만드는 GHG 프로토콜은 재생에너지 구매를 실제 전기 사용과 같은 시간·같은 전력시장 단위로 맞추라는 새 규칙의 의무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 공개 의견 조회에서 시간 단위 일치(아워리 매칭)에 찬성한 기업은 12%, 낮은 지지나 반대가 82%였고, 같은 전력시장에서 온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규칙에는 19%가 찬성하고 71%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87%)와 비용 부담(86%)이 꼽혔다. 프로토콜의 독립 기준위원회는 새 방식을 권장하되 아직 정하지 않은 날짜까지는 현행 방식을 쓸 수 있게 하고, 어느 방식을 썼는지 밝히게 하는 안을 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는 2027년 2분기,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함께 만드는 통합 기준은 2028년 4분기에 나온다. 에너지 생산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에너지의 절반을 기업이 쓴다는 점에서 이 결정의 무게는 작지 않다.

같은 주 싱가포르 정부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기준인 싱가포르 표준 673을 개정했다.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쓴 전기가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려면 국내에서 생산했거나, 승인받은 수입 사업으로 싱가포르 전력망에 물리적으로 연결돼 공급된 전기의 인증서여야 한다. 싱가포르로 전기를 보내지 않는 해외 사업의 인증서는 해외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했다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사용 전기가 재생에너지라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담당 국무장관은 기업들이 인증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이 기준이 그린워싱 우려를 줄이고 수입 전력 사업의 사업성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1.3기가와트 규모의 말레이시아 전력 수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제 기준이 느슨함을 택한 주에, 한 나라는 단단함을 택했다.

공시 기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다른 두 곳에서도 이어졌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자연 관련 공시를 의무 기준이 아닌 비강제 '실무 지침'으로 내놓고 의견을 받기 시작하자, 페더레이티드 허미스·노르데아 자산운용·라보뱅크 등 금융기관 15곳이 독립된 의무 기준을 만들라는 서

한을 냈다. 나라마다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면 정보가 흩어진다는 이유다. 유럽에서는 EU 밖 대기업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초안이 환경 영향을 '전 세계 기준' 대신 'EU와 관련된 영향'만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한 '혼합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과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EU 밖의 심각한 환경·인권 영향이 가려진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네덜란드 기관투자자 단체 에우메디온은 조건을 붙여 기업이 범위를 고를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이 기준은 2028 회계연도 정보부터 2029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3주 전 이 지면이 전한 '기준을 만드는 방의 의자' 논쟁, 2주 전 전한 '얇아지는 보고서' 흐름이 이번 주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조항으로 이어졌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2개 매체가 「Scope 2·hourly matching」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2건이다. 자연 공시는 최근 4주 동안 5개국 6개 매체가 「ISSB nature」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에는 거의 없던 이야기가 새로 늘었다. 의견 조회 결과와 싱가포르 기준 내용은 국제 ESG 매체와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스코프2 계산법의 선택은 한국 기업의 공시 숫자를 직접 바꾼다. 임팩트온이 분석한 SK㈜의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2025년 스코프2 배출량은 전력망 평균을 쓰는 지역기반 방식으로 355만 톤, 재생에너지 구매 효과를 반영한 시장기반 방식으로 340만 톤이었다. 같은 해 이 회사는 녹색프리미엄 구매에 5억 9,300만 원을 썼고, 자체 사업장 재생전력 조달 비중은 34.1%였다. 두 숫자의 차이 15만 톤이 바로 '어떤 구매를 인정할 것인가'에 걸린 몫이다. 국내 기업은 재생전력 구매 내역을 계약 유형별(녹색프리미엄·인증서 구매·전력구매계약)·월별로 지금부터 나눠 기록해 두면, 국제 기준이 시간 단위 방식으로 넘어가는 날짜가 정해져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

심층 — 연간 평균에서 시간 단위로, 전 세계에서 같은 전력망으로 (GHG 프로토콜 스코프2 개정 · 싱가포르 표준 673 · ISSB 자연 실무지침 · EU 역외 기업 보고 기준)

왜 지금 중요한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주장은 대부분 연간 총량과 넓은 지역의 인증서로 맞춘 숫자다. 낮에 태양광 인증서를 사서 밤에 쓴 화석연료 전기를 상쇄해도, 다른 나라의 풍력 인증서를 사도 숫자는 같다. 시간·장소 단위 규칙은 이 숫자를 실제 전력망의 변화에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이고, 그래서 기업 대다수가 반대했다. 이번 주 GHG 프로토콜의 유예와 싱가포르의 강화는 이 문제가 국제 기준이 아니라 각국 규제에서 먼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업은 하나의 국제 기준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인정 범위를 상대하게 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실제 전력망에 새 발전소를 연결하는 장기 계약을 맺은 기업과, 그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다. 싱가포르 장관이 말했듯, 인정 범위가 좁아지면 진짜 연결된 전기에 더 비싼 값을 낼 이유가 생긴다. 불리해지는 쪽은 값싼 해외 인증서로 목표를 맞춰 온 기업이다. 자연 공시와 EU 역외 기업 기준에서도 같은 구도가 보인다. 범위를 고를 수 있게 하면 기업의 부담은 줄지만, 투자자가 메워야 할 정보 공백은 커진다. 투자자 단체들이 이번 주 일제히 '의무'와 '전 세계 기준'을 요구한 이유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 기업은 세 겹의 일정을 동시에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의무공시는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기업부터 시작하고, EU 역외 기업 보고는 2028 회계연도 정보부터, 싱가포르처럼 자국 기준을 바꾸는 나라는 이미 적용 중이다. 유럽과 싱가포르에 사업장이 있는 국내 기업은 나라별로 어떤 재생전력 구매가 인정되는지 표로 정리하고, 국내 사업장의 녹색프리미엄 구매가 해외 고객사의 기준에서도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시간 단위 규칙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의견 조회에서 87%가 걱정했듯,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장 필요한 곳(전력망이 석탄 중심인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막을 수도 있다. 싱가포르도 해외 인증서가 '해외 개발 지원'의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남겨뒀다. 사용 주장과 기여 주장을 구분해 두 숫자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어느 기준으로 정해지든 안전하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GHG Protocol to Push Back Stricter Scope 2 Reporting Rules After Corporate Objections · Eco-Business (싱가포르, 2026-10) — Singapore tightens renewable power claims to curb greenwashing, boost clean energy imports · ESG Today (국제, 2026-10) — Investors Urge ISSB to Issue Mandatory Nature-Related Reporting Standard · ESG Today (국제, 2026-10) — EU Sustainable Finance and Investor Groups Push Back Against Weaker Sustainability Reporting Rules for Non-EU Companies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10) — Eumedion: geef grote niet-EU-ondernemingen ruimte bij afbakening duurzaamheidsverslaggeving · IMPACT ON (한국, 2026-10) — 【공시 모니터링】 SK㈜, 데이터센터 기후위험 금액 산정…투자 자회사 위험 분석은 과제

그린워싱은 전환 산업을 따라간다 — 1,594개 기업, 기후를 처음 앞지른 생물다양성, '그린'을 이름에서 지운 루프트한자

ESG 위험 데이터 기업 렙리스크가 다섯 번째 연례 그린워싱 보고서를 냈다. 2026년(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집계 연도) 그린워싱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 1,594곳으로 전년(1,243곳)보다 28% 늘었고, 사건 수는 2022년 이후 112% 늘었다. 증가를 이끈 것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산업이다. 대체에너지·광업·산업용 금속·전력·소프트웨어 등 전환 관련 업종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8%에서 2026년 29%로 커졌고, 석유·가스의 비중은 4.9%포인트 줄었다.

렙리스크 관계자는 전환 관련 그린워싱이 두 갈래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무탄소 전력으로 돌아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물 사용과 지역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사실을 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획과 실제 성과가 다른 경우로, 공급망이 없는 재생가스를 내세우는 것이 그런 예다. 올해 처음으로 생태계·생물다양성 관련 사건(300건)이 기후·배출·오염 관련 사건(275건)을 앞질렀다. 생물다양성 사건은 1년 새 41%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가 305개 기업으로 가장 많이 연루됐다.

규제가 실제로 행동을 바꾼 사례도 나왔다.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은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면 지속가능항공유와 기후 사업에 쓰는 '그린 요금'의 이름을 '임팩트 요금'으로 바꿨다. 회사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새 규제 요건을 이유로 들었고, 이는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같은 일반적 환경 주장을 금지한 EU 소비자 지침의 적용 시점과 겹친다. 이 요금은 유럽 노선에서는 예상 배출량의 20%, 대륙 간 노선에서는 10%를 지속가능항공유로 메우고 나머지는 기후 사업에 쓴다. 루프트한자는 지난해 유럽 소비자단체의 고발 이후 '추가 요금으로 비행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멈추기로 EU 집행위원회와 합의한 항공사 가운데 하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반대 방향의 다툼이 벌어졌다. 태양광 패널 제조사 솔라르허는 정부 기관인 네덜란드 기업청이 운영하는 '지속가능 태양광 패널 비교표'에서 안티몬이 없다고 표시된 다른 제조사 제품에서 안티몬이 검출됐다며 정정을 공식 요구했다. 이 비교표는 공공 입찰과 보조금 심사에 쓰이고 있어, 잘못된 정보가 공공 자금의 배분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주 전과 지난 호에 이 지면이 전한 음료 대기업의 재활용 표시 시정에 이어, 이번 주에는 감시의 대상이 표시를 하는 기업에서 표시를 검증하는 기관까지 넓어졌다.

독일 지속가능 경영 매체에 실린 유기농 면화 의류 회사 코토네아의 기고는 이 흐름의 비용을 보여준다. 키르기스스탄과 우간다의 협동조합들은 인증 비용으로 일반 판매가의 약 15%를 부담했는데, EU 유기농 규정이 강화된 뒤 추가 검사와 서류 때문에 그 비용이 세 배로 늘었다. 인도·탄자니아·우간다의 소농들이 EU 유기농 인증과 세계 유기농 섬유 기준을 떠나고 있고, 인증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재배해도 회사가 사들일 수 없다고 회사는 썼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10개국 18개 매체가 「greenwashing」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4건이다. 렙리스크 수치는 미국 ESG 매체 본문에서, 루프트한자 내용은 국제 ESG 매체 본문에서, 솔라르허와 코토네아 내용은 네덜란드·독일 지속가능 경영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한국 시사점 — 렙리스크가 말한 첫 번째 유형, 곧 '중요한 정보를 빼는 것'이 기만이 된다는 원리는 한국의 표시·광고 규제에서도 이번 주 다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약 200억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 주장은 아니지만 '빼먹은 정보'를 제재한 판단이다. 유럽에 제품을 파는 국내 기업은 환경 관련 문구를 점검할 때 '사실이 아닌 문장'뿐 아니라 '빠진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재활용 소재 비율이라면 제외된 부품을, 탄소중립이라면 상쇄의 비중을 함께 적는 방식이다.

🔒

심층 — 전환의 언어가 늘수록 검증의 대상도 넓어진다 (렙리스크 2026 그린워싱 보고서 · 루프트한자 요금 개명 · 솔라르허의 정정 요구 · 코토네아 기고)

왜 지금 중요한가. 그린워싱의 무게중심이 석유·가스에서 재생에너지·광업·소프트웨어로 옮겨 가고 있다. 전환 산업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주장이 커지기 쉽고, 생물다양성처럼 측정이 어려운 주제가 늘면서 주장과 근거의 차이도 벌어진다. 금융서비스가 가장 많이 연루된 업종이라는 점은,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 이름표가 다음 감시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번 호 첫 꼭지에서 본 스페인의 '기본 ESG 92%'와 같은 맥락에 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주장을 줄이고 근거를 늘린 기업이다. 루프트한자는 이름에서 '그린'을 지웠지만 요금 구조와 배분 비율은 그대로 공개했다. 이런 방식은 규제 위험을 줄이면서도 고객에게 무엇을 사는지 알려 준다. 불리해지는 쪽은 검증되지 않은 비교표·인증·등급에 기대 온 기업과 기관이다. 솔라르허의 정정 요구처럼, 경쟁사가 직접 시험해 반박하는 일이 늘면 공공 기관의 데이터도 검증 대상이 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에서는 공공 조달의 친환경 인증과 녹색제품 구매가 큰 시장이다. 임팩트온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 곳의 2024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만 400억 3,500만 원이었다. 이 시장에서 쓰이는 인증과 비교 정보가 정확한지는 공공 자금의 배분과 직결된다. 공공기관과 조달 담당자는 인증 정보의 갱신 주기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공개하고, 납품 기업은 인증의 근거 시험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놓치기 쉬운 함정. 검증이 단단해질수록 작은 생산자가 먼저 떨어져 나간다. 코토네아가 쓴 대로, 인증 비용이 세 배가 되자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소농들이 인증을 포기했다. 그린워싱을 막는 규제가 '진짜로 좋은 일을 하지만 증명할 돈이 없는' 생산자를 시장에서 지우면, 규제는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낸다. 검증 비용의 공동 부담이나 소규모 생산자용 단체 인증 같은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출처: ESG Dive (미국, 2026-10) — Energy transition-linked industries face surge in greenwashing: RepRisk · ESG Today (국제, 2026-10) — Lufthansa Renames Green Fares to Align with Anti-greenwashing Regulation · Duurzaam Ondernemen (네덜란드, 2026-10) — Solarge sommeert RVO om onjuiste duurzaamheidsinformatie over zonnepanelen te corrigeren · forum Nachhaltig Wirtschaften (독일, 2026-10) — Lust und Last der Zertifizierung · IMPACT ON (한국, 2026-10)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삼성전자 광고 제재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책임은 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 연무의 책임을 증시와 은행에 묻는 싱가포르, 은행의 탄광 금융을 OECD에 올린 교회들, 그리고 '구매 조건'을 보라는 투자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산불로 싱가포르가 10년 만에 최악의 연무를 겪자, 싱가포르 정부가 해외 기업의 책임을 금융과 자본시장으로 묻기 시작했다. 근거는 2014년 제정된 '국경 간 연무 오염법'이다. 해외에서 난 불이 싱가포르의 대기를 오염시키면 기업 소재지가 해외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법이다.

국립환경청은 16일과 19일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10곳에 불을 끄고 소각을 멈추라는 예방조치 통지를 보냈고, 23일에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팜유·제지 관련 기업 10곳에 현지 기업과의 지분·사업 관계, 토지 이용권, 화재 대응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대상에는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 관련 법인 2곳과 윌마 인터내셔널, 퍼스트 리소스 등이 포함됐다. 싱가포르거래소는 팜유·농업 상장사 7곳에 화재 연루 여부를 물었고, 통화청은 이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의 위험 관리를 살피겠다고 했다. 16~18일 일부 지역의 24시간 대기오염지수는 200을 넘었다.

28일에는 샨무감 선임장관이 부총리, 환경장관과 함께 관련 기업 8곳의 경영진을 직접 만났다. 싱가포르 일간 매체에 따르면 그는 "연무는 불에서 오고, 불은 무책임한 사업 관행에서 온다"며 법 10조에 따른 통지는 일상적인 자료 요청이 아니라 응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법적 통지라고 못 박았다. 기업 구조나 제3자 계약을 사실 확인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게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계도 분명하다. 이 법은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 총 2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유죄 판결은 한 건도 없다. 해외 토지의 소유 관계와 소각 행위의 인과를 입증할 증거를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융과 지배구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은 그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같은 질문은 남미에서도 나왔다. 아르헨티나 사회책임 매체에 따르면 콜롬비아 감리교회와 영국·아일랜드 감리교회, 교회 자금을 운용하는 엡워스투자운용 등은 6월 5일 HSBC가 콜롬비아 라과히라의 노천 탄광 세레혼을 운영하는 글렌코어와 금융 관계를 맺은 것을 두고 영국 OECD 국가연락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물·건강·원주민 공동체 피해 논란이 이어져 온 광산이다. 매체는 이것이 판결이 아니라 '제기됨' 상태이며, 대출이 탄광에 직접 쓰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같은 주 영국 자산운용사 슈로더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을 만든 팀이 세운 비영리단체 시프트는 투자자들에게 협력사의 강제노동 위험을 볼 때 '구매 조건'을 보라고 권하는 보고서를 냈다. 가격 인하 압박, 촉박한 납기, 중개인을 통한 채용, 재고 위험 떠넘기기가 착취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다. 슈로더는 동종 기업보다 대금을 빨리 지급하는 기업이 일부 재무 지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했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호에 이 지면이 전한 싱가포르 3대 은행의 '자가발전 석탄' 금융 논란에 이어, 이번 주에는 정부와 교회와 투자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댄 쪽의 책임'을 물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4개국 12개 매체가 「haze·Singapore」 이야기를 다뤘고, 전체 기사량을 감안해도 직전 4주보다 약 3.0배 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4건이다. 조사 대상과 법 조항은 국내 ESG 매체와 싱가포르 매체 본문에서, 세레혼 이의 제기와 슈로더·시프트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사회책임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슈로더·시프트가 위험 지표로 꼽은 '대금 지급 기한'은 한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서 가능한 한 짧은 기한에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한다. 한국 기업이 해외 투자자의 공급망 인권 질문을 받을 때 이 법정 기한을 얼마나 앞당겨 지키는지, 실제 평균 지급 일수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내놓으면 그 자체가 '구매 조건'의 증거가 된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료에서 공급망 제3자 검증 대상을 1차 협력회사 122곳, 2차 협력회사 39곳으로 넓혔다고 밝혔다. 검증 항목에 단가 협상과 납기 조건까지 넣을지가 다음 질문이다.

🔒

심층 — 직접 오염하지 않았어도 돈을 댄 쪽은 묻는다 (싱가포르 국경 간 연무 오염법 · HSBC·세레혼 이의 제기 · 슈로더·시프트 강제노동 보고서)

왜 지금 중요한가. 환경과 인권 피해가 국경 밖에서 생길 때, 피해국의 법은 대개 닿지 않는다. 싱가포르가 12년 동안 유죄 판결을 하나도 끌어내지 못한 것이 그 증거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기업이 자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자국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지렛대로 삼았다. 영국 교회들이 은행을 OECD 절차에 올린 것도, 슈로더가 투자자에게 구매 조건을 보라고 한 것도 같은 논리다. 책임을 묻는 자리가 피해 현장에서 자금이 흐르는 경로로 옮겨 가고 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공급망과 자금 흐름을 스스로 추적할 수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이다. 퍼스트 리소스처럼 '무소각 정책'을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객관적인 기록이 있을 때만 그 말을 지킬 수 있다. 불리해지는 쪽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제3자 계약 뒤에 있던 기업이다. 싱가포르 장관이 직접 경고한 것도 그 지점이다. 은행은 '우리는 광산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더 이상 답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맞고 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도 동남아 팜유·제지·광물 공급망에 연결돼 있다. 국내 은행과 기업은 동남아 협력사와 대출처 가운데 토지 이용이 큰 업종을 먼저 골라, 소유 관계와 화재·인권 대응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공급망 실사 의무가 법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도, 해외 투자자와 거래소가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다.

놓치기 쉬운 함정. 이의 제기와 조사는 사실 확정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매체가 강조했듯, 세레혼 사건은 아직 '제기됨' 상태이고 대출의 용도도 확인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조사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단계의 정보를 근거로 거래를 끊거나 평판을 단정하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기업까지 정보 공개를 꺼리게 된다. 사실 확인의 절차와 결과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산불 관련 팜유·제지 관련 기업 20곳 조사… 은행·증시까지 압박 확대 · AsiaOne (싱가포르, 2026-10) — 'You know the Singapore Govt. We will do what is right': What Shanmugam told leaders of firms allegedly linked to haze · ComunicaRSE (아르헨티나, 2026-10) — La financiación de Cerrejón pone a HSBC bajo la lupa de la OCDE · ComunicaRSE (아르헨티나, 2026-10) — Trabajo forzoso: los inversores ponen la lupa en las condiciones de compra · 아웃소싱타임스 (한국, 2026-10) — [기획] ESG 공시, 대기업 보고서에서 협력사 장부로…아웃소싱 기업도 데이터 준비 서둘러야

결과에 값을 매기는 돈 — 상환이 공공계약에 걸린 1억 달러 대출 펀드, 1유로가 4.30유로가 된 재단의 25년 결산, 그리고 맥아더의 촉매 자본이 간 두 곳

미국의 민간 신용 임팩트 운용사 메이콤캐피털이 두 번째 '지역사회 성과 펀드'를 1억 달러로 마감했다. 이 회사는 10년 동안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이 정부와 맺은 공공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운영자금을 빌려줘 왔다. 정부가 성과에 따라 돈을 주는 계약이 많아, 대출은 그 성과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의 다리 역할을 한다. 앵커 투자자는 발머그룹과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고, 2018년 5,300만 달러로 마감한 첫 펀드의 상환·성과 기록이 두 번째 펀드를 가능하게 했다.

마감에는 2년 넘게 걸렸다. 새 펀드는 고교 졸업반의 대학·취업 준비를 주정부 성과 연동 지급과 연결한 단체에 1,000만 달러, 테네시주 마약성 진통제 위기 피해 가정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200만 달러, 농촌 '마이크로 클리닉' 네트워크에 300만 달러를 빌려줬다. 운용사는 연방 재정의 변동성 때문

에 차입자 대부분이 주·지방 재원에 기대는 점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재단의 25년 결산이 숫자로 나왔다. 인력 기업 아데코의 재단은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 2001년 이후 투입한 1,280만 유로가 공공재정의 세수 증가, 복지 급여 절감, 연금 기여, 수혜자의 자원봉사 시간까지 합쳐 5,530만 유로의 가치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1유로당 4.30유로다. 25년 동안 취약 계층 1만 1,359명을 지원했고, 2,935건의 취업 준비 과정과 639개의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했다. 2021~2025년 재원의 73.1%는 아데코 그룹 밖의 기부였다. 평가 결과는 이탈리아 하원에서 발표됐다.

3주 전 이 지면은 맥아더재단이 임팩트 투자 한도를 7억 5,000만 달러로 50% 늘렸다고 전했다. 이번 주 그 돈이 두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비영리 금융기관 소셜파이낸스는 지역 언론사에 투자하는 2,100만 달러 펀드를 출범했는데, 앵커는 맥아더재단과 나이트재단이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맥아더가 임팩트 투자 프로그램으로 지역 언론에 투자한 것은 처음이며, 그 돈은 7억 5,000만 달러의 촉매 자본에서 나왔다.

투자 규모는 건당 50만~200만 달러이고, 영리·비영리 언론사 모두 대상이다. 지역 뉴스 접근이 제한된 미국인은 약 5,000만 명으로 집계된다. 맥아더는 호주에서도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호주의 폴램지재단 등 4개 재단은 미국의 '촉매자본컨소시엄'을 본뜬 C3 오스트레일리아를 1,050만 호주 달러로 시작한다. 재단들이 의뢰한 조사에서 호주에서 최근 3년간 집행된 촉매 자본은 약 1억 호주 달러로, 주요 임팩트 투자 재단 자산의 1%도 되지 않았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2개 매체가 「outcomes-based·impatto sociale」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펀드 구조와 대출처는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 본문에서, 아데코 재단 평가는 이탈리아 사회 분야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
> **심층 — 성과를 숫자로 쓰는 세 가지 방식과 그 대가 (메이콤 지역사회 성과 펀드 · 아데코 재단 25년 사회적 영향 평가 · 맥아더 촉매 자본)**
>
>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꼭지의 세 사례는 '결과'를 돈의 언어로 바꾸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메이콤은 공공계약의 성과 지급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대출 위험을 관리한다. 아데코 재단은 사업이 끝난 뒤 공공재정에 돌아온 가치를 계산한다. 맥아더와 호주 재단들은 시장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위험을 먼저 떠안아 다른 자본이 들어올 길을 연다. 첫 꼭지에서 본 GIIN의 '효과'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이고, 정부 재정이 흔들리는 시기에 각각의 쓰임이 분명해진다.
>
>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성과 기록이 쌓인 운용사와 조직이다. 메이콤의 두 번째 펀드는 첫 펀드의 상환 기록 덕분에 어려운 모금 환경에서도 마감됐다. 아데코 재단이 외

부 기부를 73.1%까지 끌어온 것도 측정된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불리해지는 쪽은 성과를 기록하지 않은 채 공공계약에 기대 온 단체다. 정부 지급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때 다리 역할을 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성과가 먼저 필요하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도 정부·지자체 위탁 사업과 성과 연동 지원에 크게 기대고 있고, 지급 시점과 운영비 지출 시점의 차이 때문에 자금이 막히는 일이 잦다. 이번 호 한국 꼭지에서 다루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가 82억 7,600만 원에서 0원으로 편성된 것처럼 지방 재원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이 공백이 더 커진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 은행은 공공계약 잔금을 근거로 한 운영자금 대출 상품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사업별 성과와 지급 이력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는 일을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1유로당 4.30유로 같은 사회적 투자수익률 숫자는 계산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 세수 증가와 복지 절감을 어디까지 이 사업의 몫으로 볼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고, 다른 재단의 숫자와 바로 비교할 수도 없다. 성과 연동 계약도 마찬가지다. 측정하기 쉬운 성과에 돈이 몰리면, 측정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은 뒤로 밀린다. 숫자는 계산 근거와 함께 공개될 때만 신뢰를 얻는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Exclusive: Maycomb Capital raises $100 million for second outcomes-based financing fund · Vita (이탈리아, 2026-10) — Quei 12,8 milioni investiti trasformati in 55,3 di impatto sociale · Impact Entrepreneur (미국, 2026-10) — Social Finance Launches $21 Million Impact Fund for Local News · ImpactAlpha (미국, 2026-10) — Four foundations in Australia take the Catalytic Capital Consortium down under

개발금융이 '단순하게'를 약속했다 — 방콕 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세 가지 결론, 104억 달러를 모은 TPG 기후 펀드, 그리고 신흥국 여성에게 가는 두 갈래의 돈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대홍수에서 회복 중인 방콕에서 열렸다.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에 기고한 개발금융기관 관계자는 원조 예산 삭감과 다자 협력 후퇴로 어두웠던 지난 몇 년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들 사이에 협력의 기운이 보였다고 썼다. 근거로 든 사례는 구체적이다. 영국국제투자공사는 올해 10억 달러 규모 알리안츠 펀드의 앵커를 맡고, 동남아에 민간 자본 50억 달러를 모으려는 싱가포르 기반 혼합금융 사업 출범을 도왔다.

프랑스 개발금융기관 프로파르코는 서아프리카개발은행과 유로·세파프랑 간 통화 교환 구조의 2억 유로 금융을 맺었고, 프로파르코·독일 DEG·네덜란드 FMO는 과테말라 방코 인두스트리알에 재생에너지·녹색건물·지속가능 교통 대출용으로 3억 달러를 공동 제공했다.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은 범아프리카 은행 에코뱅크와 30억 달러 규모 무역금융 협력도 만들었다. 그가 꼽은 마지막 결론은

'단순화'였다. 벤처캐피털, 보험사, 연기금, 국부펀드가 모두 같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통일된 임팩트 측정, 표준화된 정책, 더 큰 거래 규모. 그는 거래 구조 하나를 다듬는 데 2년을 쓰는 방식은 더는 안 된다고 썼다.

같은 주 사모투자 운용사 TPG는 기후 펀드 2호와 '글로벌 사우스 이니셔티브'를 합쳐 104억 달러로 최종 마감했다. 신흥시장 기후 해법에 장기 사모 자본을 대는 글로벌 사우스 이니셔티브는 아랍에미리트의 기후 투자 플랫폼 알테라가 5억 달러를 낸 것을 시작으로 목표인 25억 달러를 채웠다. 약정의 31%는 TPG와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서 나왔다. 지난 호에 이 지면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이 전략에 최대 1억 달러를 넣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이번 주 그 전략의 최종 규모가 확정됐다. 같은 주 영국 기반 인프라 개발그룹 산하 보증기관 개런트코는 신흥시장 성장 기업에 대출하는 미국 임팩트 투자사 알마의 성별 렌즈 펀드에 7,500만 달러 부분 신용보증을 제공해 1억 달러의 민간 자본 조달을 성사시켰다.

앵커 투자자는 에이곤 자산운용이고, 알마가 1,000만 달러의 후순위 몫으로 첫 손실을 먼저 떠안았다. 자본을 돌려쓰면 최대 2억 4,000만 달러를 집행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노동자 소비자금융 공공기관 인포나콧이 여성 노동자 급여 담보 대출 재원을 위해 성별 렌즈 사회채권 57억 5,000만 페소를 발행했다. 주문은 123억 2,300만 페소로 발행액의 두 배를 넘었고, 5년물 가산금리는 79bp에서 73bp로 내려 이 기관의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 이 기관의 대출에서 여성 비중은 2017년 34%에서 2025년 39%로 늘었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2개 매체가 「development finance·DFI」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연차총회 내용은 미국 임팩트 투자 매체 기고문 본문에서, TPG와 개런트코 내용은 국제 ESG 매체와 미국 임팩트 매체 본문에서, 인포나콧 채권은 멕시코 사회책임 매체 본문에서 확인했다.

> 🔒
>
> **심층 — 위험을 먼저 떠안는 돈과 그 뒤를 따르는 돈 (세계은행 연차총회 · TPG 기후 펀드 · 개런트코·알마 성별 렌즈 펀드 · 인포나콧 사회채권)**
>
> **왜 지금 중요한가.** 첫 꼭지에서 본 GIIN 조사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투자자 42%의 관심 지역이지만 자본의 5%만 받았다. 관심과 실제 배분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이번 꼭지 사례들의 공통점이다. 개런트코의 7,500만 달러 보증과 알마의 1,000만 달러 후순위 몫은 에이곤 같은 기관투자자가 신흥시장 대출에 들어올 수 있게 위험을 덜어 줬다. 세계은행 회의에서 나온 '단순화' 요구도 같은 문제를 거래 절차에서 푸는 방법이다. 원조가 줄어드는 시기에 개발금융의 역할은 직접 빌려주는 사람에서 위험을 나누는 설계자로 바뀌고 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표준화된 구조로 큰 거래를 만들 수 있는 운용사와 플랫폼이다. TPG가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서 31%를 모은 것은 규모와 구조가 새 자본을 부른다는 뜻이다. 멕시코 인포나콧처럼 사회적 목적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증명한 공공기관은 더 싼 조달 비용을 얻었다. 불리해지는 쪽은 작은 규모로 복잡한 구조를 고집하는 기관이다. 개발금융기관들이 '2년짜리 거래'를 반성한 것처럼, 맞춤형 구조는 민간 자본에게 비용이자 장벽이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의 공적 금융도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호에 전했듯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올해 1~9월 지원액 90.9%가 대기업에 갔다. 라벨이 붙은 공적 기금이 위험이 큰 곳에 먼저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지, 이미 안전한 곳에 돈을 더하는지는 설계의 문제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은 기금별로 후순위·보증 같은 위험 분담 비중을 따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여성 소상공인 대출처럼 사회적 목적이 분명한 대출 자산을 묶어 사회채권으로 조달하는 멕시코 방식도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검토할 만하다.

놓치기 쉬운 함정. '단순화'와 '규모'가 측정의 깊이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거래가 커지고 구조가 표준화될수록 개별 현장의 성과를 들여다보기 어려워진다. 104억 달러 펀드의 기후 효과와 1억 달러 성별 렌즈 펀드의 여성 기업 지원 효과는 서로 다른 측정을 필요로 한다. 표준화할 것은 서류와 절차이지 성과의 정의가 아니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Collaboration and cautious optimism among development investors and bankers · ESG Today (국제, 2026-10) — TPG Raises $10.4 Billion for Climate Funds, Including $2.5 Billion for Global South · Impact Entrepreneur (미국, 2026-10) — GuarantCo Mobilizes $100 Million for ALMA's Gender-Lens Fund · ExpokNews (멕시코, 2026-10) — INFONACOT realiza dos emisiones etiquetadas con una colocación por un monto de $5,750 millones de pesos bajo un enfoque de género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기본법 시행 다섯 달 앞, 가장 큰 광역정부가 전담국을 없앤다 —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안과 목적사업비 0원의 사회적경제원

경기도가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실·미래성장산업국·국제협력국·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로 합치고, 사회혁신경제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사회연대경제 업무는 경제산업실로, 공동체 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옮기지만, 중장

년 지원과 사회혁신경제 기획을 맡을 부서는 개편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예산은 더 크게 줄었다. 사회 분야 전문 매체가 정리한 내년 본예산 1차 편성안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은 올해 56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56.5% 줄었고, 사업 수는 51개에서 31개가 됐다.

국비 사업 116억 원은 모두 반영됐지만 도 자체 사업은 신청액 261억 원의 절반 수준인 131억 원에 그쳤다. 도가 출연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남고, 지원사업에 쓰는 목적사업비는 올해 82억 7,600만 원에서 0원이 됐다. 중장년 정책을 맡은 베이비부머기회과 예산은 145억 7,700만 원에서 20억 2,800만 원으로 86.1% 줄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도 과거 20억 원 수준에서 8억 원, 다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현장의 반발은 조직 하나의 문제를 넘어선다. 사회연대금융 지역 중개기관 네트워크 '아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사회적경제센터 6개 부문 협의회가 22~23일 잇따라 철회를 요구했다. 27일에는 국회의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29일에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가 지지 성명을 냈다. 현장이 문제 삼는 것은 시점이다. 13년 만에 만들어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27년 3월 시행되고, 이 법은 지방정부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책무를 준다.

법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키우는 순간에 전국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광역정부가 총괄 조직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현장 지원 사업 다수가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쓰는 매칭 구조여서, 도 예산이 줄면 재정이 약한 시군은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기도는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겹치는 기능을 통합하는 효율화라는 입장이고, 27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지사가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입법예고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치는 1차 편성안이며, 조례안과 예산안은 11월 도의회 심의를 거친다.

비교할 숫자는 유럽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윤리금융재단과 유럽 윤리·대안은행연합이 낸 아홉 번째 유럽 윤리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윤리은행 대출의 98.36%가 사회·환경 목적 활동에 쓰여 유럽 주요 은행(18.47%)과 큰 차이를 보였고, 부실채권 비율은 2.11%로 대형 은행(2.28%)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430만 개 넘는 조직과 1,150만 명 넘는 노동자를 품고 있지만, 담보가 없는 조직은 전통적인 은행 기준으로는 평가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 평가를 대신해 온 것이 중간 지원 조직과 지역 사회연대금융이다. 지난 세 호에 걸쳐 이 지면이 전한 광명시의 조례와 앵커기관 협약이 '중간 조직을 법과 협약으로 묶는 실험'이었다면, 이번 경기도의 편성안은 그 반대 방향의 실험이 된다.

> 근거 — 최근 4주 동안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사회혁신경제국」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아직 한두 곳뿐이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1건이다. 다만 같은 사안을 다룬 사설과 성명 보도가 사회적경제 전문 매체와 비영리 전문 매체 본문에 더 있었고, 예산 수치는 그 본문에서 서로 대조해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경기도의 결정은 11월 도의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다. 그 사이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줄이면 무엇이 사라지는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일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 원이 지난해 어떤 조직 몇 곳의 창업·판로·금융에 쓰였고, 그 조직들이 고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공개하면 효율화 논리에 같은 언어로 답할 수 있다.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행계획에 전담 조직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넣을지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문제이고, 현장 단체들은 이 기준을 지금 제안할 수 있다.

🔒

심층 — 법이 생긴 뒤에 오는 첫 시험은 예산이다 (경기도 조직개편안 · 2027년 본예산 1차 편성안 · 유럽 윤리금융 보고서)

왜 지금 중요한가. 법은 방향을 정하지만 실행은 조직과 예산이 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방정부에 책무를 줬지만, 그 책무를 이행할 조직의 형태나 예산의 하한은 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편성안은 이 빈칸이 실제로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첫 사례다.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규모가 작고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면, 사회연대경제는 늘 그 목록의 맨 위에 오른다. 국비 사업은 그대로 두고 도 자체 사업을 절반으로 줄인 구조가 그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승자와 패자. 불리해지는 쪽은 도의 지원 사업과 매칭 재원에 기대 온 조직, 그리고 재정이 약한 시군의 현장이다. 사업비 없이 인건비만 남은 중간 지원 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장년 정책 예산이 86.1% 줄어드는 것은 은퇴를 앞둔 세대의 일자리·사회 참여 경로에도 영향을 준다.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쪽은 국비 사업에 연결된 조직과 자체 매출 기반이 있는 기업이다. 이번 일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재원 구조를 공공 의존에서 다변화해야 한다는 오래된 과제를 다시 앞으로 꺼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11월 경기도의회 심의까지가 첫 기회이고, 2027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전 시행령과 종합계획이 두 번째 기회다. 현장 단체는 도의회에 사업별 성과 자료를 제출하고, 중앙정부에는 지방 시행계획에 전담 조직과 최소 예산 기준을 넣자고 제안할 수 있다. 개별 조직은 공공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이나 지역 금융기관과의 거래 이력을 지금부터 쌓아 둘 수 있다. 유럽 윤리은행의 낮은 부실률은 사회적경제 대출이 반드시 위험한 대출이 아니라는 근거로 쓸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이 논쟁을 '삭감 대 유지'의 진영 싸움으로만 보면 현장이 얻을 것이 적다. 재정 비상은 실제 상황이고, 겹치는 기능을 정리하자는 주장에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 현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떤 기능이 겹치지 않고 어떤 성과가 이 조직에서만 나

오는지를 보여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논리가 반복된다.

출처: 캐어유 뉴스 (한국, 2026-10) —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업비 0원 편성안,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흔들립니다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을 없애는 것이 효율인가 · NGO뉴스 (한국, 2026-10) — "마을예산 반토막, 주민자치 흔든다"…전국 마을단체, 경기도 정책 후퇴 비판 · ESG News Italia (이탈리아, 2026-10) — Banche etiche, il 98,36% dei prestiti sostiene attività sociali e ambientali

의무공시를 앞둔 한국 기업의 기후 장부 — 한전의 72조 8,000억 원과 SK㈜의 7억 9,300만 원, 그리고 협력사로 내려가는 자료 요청

금융위원회가 7월 8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2027 회계연도 정보를 처음 공시하고,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넓힌다. 정부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공시 범위에 드는 기업을 2028년 291곳, 2029년 3,171곳으로 예상했다. 공급망 배출(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적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2025년 코스피 819개사 가운데 ESG 정보를 공시한 곳은 225개사(27.5%)였다. 의무공시를 앞두고 국내 ESG 매체 임팩트온이 자체 분석 도구로 주요 기업 보고서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후공시 기준에 비춰 점검하는 연재를 이어 가고 있고, 이번 주에는 한국전력과 SK㈜가 대상이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변전 투자 부담을 전환위험으로, 태풍·호우 같은 기상이변의 설비 피해를 물리적 위험으로 나눠 공개했다. 2024년 11월 이사회 안에 전력계통위원회를 만들었고,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596개 사업 가운데 114개를 핵심사업으로 골랐으며 그중 64개가 무탄소 전원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4~2038년 투자 필요액은 72조 8,000억 원으로 직전 계획보다 16조 3,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가운데 기후 전환위험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기상이변에 노출된 설비의 자산가치와 비율도 공개하지 않았다. 스코프3 배출은 1억 7,139만 톤으로 스코프1·2를 합친 규모의 약 196배였고, 친환경 전력기자재 구매는 2024년 6,892억 원으로 전체 기자재 구매의 25.8%(2022년 16.6%)였다. 내부탄소가격의 적용 여부와 기후 성과의 경영진 보상 반영은 확인되지 않았다.

SK㈜는 위험을 금액으로 적은 쪽이다. 탄소 규제가 강한 시나리오에서 대덕 데이터센터의 2040년 추가 전력비는 연 7억 9,300만 원, 현행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3억 4,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상고온에 따른 예상 손실률은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2030년 3.26%에서 2050년 5.86%로 오르고, 데이터센터 건물의 장부가액은 75억 원(유형자산의 약 2.0%)이라고 밝혔다.

내부탄소가격은 톤당 1만 1,066원으로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 신축 타당성 검토에 쓰고, 'Net Zero 실행력 강화'(3%)와 '기후 연결 공시 대응'(2%)을 CEO를 포함한 전 임직원 성과급 지표에 넣었다. 다만 스코프3의 85.1%가 투자 항목에서 나오는데, 투자 자회사의 기후위험이 회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아웃소싱타임스는 같은 흐름이 협력사로 내려간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6일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업종이 아닌 협력업체를 스코프3 공시 범위에서 빼는 방안을 밝혔지만, 국내 공시 유예와 해외 고객사의 자료 요청은 별개라는 것이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한국의 2개 매체가 「KSSB·기후공시」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7건이다. 두 기업의 수치는 국내 ESG 매체의 공시 점검 기사 본문에서, 정부 로드맵과 예산정책처 집계는 아웃소싱 업계 매체의 기획 기사 본문에서 확인했다.

한국 시사점 — 두 기업 보고서가 공통으로 비어 있는 곳은 '가장 큰 숫자의 재무 영향'이다. 한전은 72조 8,000억 원 투자 가운데 기후 몫을, SK㈜는 스코프3의 85.1%를 차지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금액으로 적지 않았다. 의무공시 첫해 대상인 국내 대기업은 이 지점을 먼저 메우는 것이 좋다. 사업이 큰 곳일수록 위험 분석을 한 사업장(대덕 데이터센터)이나 한 항목(전력망 투자)에 집중하기 쉽지만, 투자자가 묻는 것은 회사 전체에서 가장 큰 노출이다. 협력사는 국내 스코프3 유예 일정과 상관없이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과 산출 근거를 지금 정리해 두면 고객사마다 다른 양식의 요청에 같은 자료로 답할 수 있다.

🔒

심층 — 숫자를 쓴 기업과 숫자를 비운 기업의 차이 (금융위원회 공시 제도화 방안 · 임팩트온 공시 점검 · 아웃소싱타임스 기획)

왜 지금 중요한가. 첫 의무공시 대상 기업의 2027 회계연도 정보가 첫 보고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쌓는 데이터가 곧 첫 공시가 된다는 뜻이다. 한전과 SK㈜의 보고서는 체계(이사회 감독·시나리오 분석·배출량)는 상당 부분 갖췄지만 재무 연결은 비어 있다는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이번 호 세 번째 꼭지에서 본 것처럼 국제 기준은 계산 범위를 두고 흔들리고 있지만, 투자자가 묻는 '이 위험이 회사 재무에 얼마인가'라는 질문은 흔들리지 않는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SK㈜처럼 작은 사업장이라도 위험을 금액으로 적고, 내부탄소가격과 보상을 연결해 둔 기업이다. 금액을 적은 경험이 있어야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불리해지는 쪽은 체계는 갖췄지만 숫자를 비운 기업이다. 공시가 의무가 되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바로 비교되고, 빈칸은 그 자체로 정보가 된다. 협력사 가운데서는 고객사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한 곳이 거래를 지키기 쉽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금융위원회 로드맵의 첫 보고 대상인 2027 회계연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대상 기업은 지금 가장 큰 사업 한두 개를 골라 기후위험의 재무 영향을 금액으로 시험 산정해 보고, 내부탄소가격을 투자 심사에 실제로 쓰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으로 추진하는 '한 번 입력해 여러 고객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현되면 협력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협력사는 이 플랫폼의 데이터 항목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공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18.7%로 미공시 기업(7.4%)보다 높다는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시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로 읽으면 안 된다. 예산정책처 스스로 공시 역량을 갖춘 대기업에 외국인과 국민연금 투자가 몰릴 수 있어 인과관계 해석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공시의 효과를 과장하면 첫해 공시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공시 모니터링】 한국전력, 전력망 투자 72.8조원 계획… 기후위험 재무영향 공시는 미흡 · IMPACT ON (한국, 2026-10) — 【공시 모니터링】 SK㈜, 데이터센터 기후위험 금액 산정…투자 자회사 위험 분석은 과제 · 아웃소싱타임스 (한국, 2026-10) — [기획] ESG 공시, 대기업 보고서에서 협력사 장부로…아웃소싱 기업도 데이터 준비 서둘러야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포드재단의 전략 개편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호에 전한 포드재단의 전략 개편은 이번 주 세부안이 나왔다. 1월 취임한 헤더 거킨 이사장은 프로그램 분야를 19개에서 7개로 줄이고, 다년간 지원의 건수와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14개월 동안 새 전략을 다듬으며 새 방향에 들지 않는 기존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리하고, 인종 정의 기금을 따로 만든다. 장애 권리·기후·예술·이민 분야는 새 분류에 흡수된다. 장애 권리 단체 쪽에서는 독립 분야가 사라지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큰 재단의 분야 축소는 지원받던 단체들의 재원 구조를 한꺼번에 바꾼다.

출처: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미국, 2026-10) — Ford's 'absolutely seismic' reboot comes into focus

일본 거래소가 ESG 지수 선물 거래를 멈췄다. 일본거래소그룹 산하 오사카거래소는 2023년 5월 상장한 ESG 지수 선물 3개 상품의 거래를 27일부터 중단하고 새 결제월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2025년 내내 세 상품 모두 거래량과 미결제약정이 0이었다. 지속가능 투자 상품이 이름만으로는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례다. 첫 꼭지의 스페인 수치처럼 'ESG'라는 이름표를 단 자산은 많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쓰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0) — 【日本】大阪取引所、ESG指数先物3商品の取引休止。取引高・建玉ゼロ続いていた

이탈리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58%가 2030년 안에 닿지 않는다. 이탈리아지속가능발전연합(ASviS)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한 정량 목표 38개 가운데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거나 크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11개(29%)였고, 58%는 지금 추세로는 달성하지 못한다. 빈곤, 불평등, 여성 고용, 에너지 전환이 가장 뒤처진 영역이다.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의 비중이 1년 새 53%에서 47%로 줄었다. 보고서는 2027년 총선 전 마지막 보고서로, 다음 국회에 국가 전략을 요구했다.

출처: ESG News Italia (이탈리아, 2026-10) — Rapporto ASviS 2026: il 58% degli obiettivi di sostenibilità dell'Italia è fuori portata

인도의 기업 재단이 공립 직업훈련원 70곳에 실습실을 만든다. 슈나이더일렉트릭 인도재단은 타밀나두주 정부와 함께 공립 산업훈련원(ITI) 70곳에 전기·자동화 실습실을 세운다. 28일 23개 지역 30곳의 실습실이 먼저 문을 열었고, 해마다 약 9,250명의 훈련생이 쓸 수 있다. 나머지 40곳까지 합치면 약 2만 5,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사회공헌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인도에서, 기업 재단이 주정부의 공공 훈련 체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다.

출처: India CSR (인도, 2026-10) — Schneider Electric India Foundation Partners Tamil Nadu Govt. to Empower Youth Across 70 ITIs

05 이번 호 전망

> 이번 호 전망 없음 — 기한과 판정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후보는 제3섹터 보도량 한 건뿐이었고, 제3섹터는 형제지 커뮤니티 임팩트가 맡는 영역이라 이 지면에 싣지 않았다

06 지난 전망 점검

이 지면이 기한과 판정 기준을 붙여 내놓은 지난 전망은 아직 없다.

지난 4개 호에서 이 지면은 「몇 개월 뒤 한국에 닿는다」 같은 시기 주장을 4번 했지만, 판정 기준과 기한을 붙이지 않아 맞았는지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말들은 채점에 넣지 않았고, 이번 호부터는 기한과 기준을 붙인 전망만 낸다.

07 편집장의 글

① 약속을 지키게 하는 장치의 값

이번 주에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은 앤트로픽 상장 서류의 한 줄이었다. 주주의 초다수가 동의하면 공익신탁의 권한을 신탁의 동의 없이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문장은 이 회사의 선의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이 구조를 '지배구조 실험'이라고 불렀다. 다만 이 문장은 공익의 약속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 준다.

사명이 법에 있으면 법을 바꿔야 하고, 정관에 있으면 정관을 바꿔야 하고, 계약에 있으면 계약 당사자의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 지난 호에 전한 콜로라도 공익법인의 3분의 2가 서류상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숫자와 이번 주의 문장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약속의 강제력은 그 약속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잴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목적을 내건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회사의 사명이 어디에 적혀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② 같은 숫자를 다른 자로 재는 시대

GHG 프로토콜이 시간 단위 재생전력 규칙을 미루고 싱가포르가 해외 인증서를 막은 것은 같은 주에 일어난 반대 방향의 결정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하나의 국제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기대가 무너지고, 나라마다 다른 인정 범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혼란에는 정보가 있다. 기업 82%가 반대한 규칙을 한 나라가 자국 시장에서 먼저 적용했다는 것은, 기준의 방향이 결국 실제 전력망의 변화 쪽으로 간다는 뜻이다.

스페인의 지속가능 투자 2,714억 유로 가운데 임팩트에 정렬된 몫이 1%였다는 숫자도 같은 구조를 갖는다. 넓은 이름표 안에 좁은 실체가 있다. 이 지면은 앞으로도 이름표의 크기보다 그 안의 실체를 재는 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목하려 한다. SK㈜의 시장기반과 지역기반 스코프2 차이 15만 톤처럼, 자를 바꾸면 달라지는 숫자를 지금 따로 적어 두는 기업이 다음 기준 앞에서 덜 흔들린다.

③ 법이 생긴 뒤의 첫 겨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현장은 13년의 기다림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두 달 남짓 지나 가장 큰 광역정부가 전담국 폐지와 목적사업비 0원의 편성안을 내놓았다. 법은 지방정부에 책무를 줬지만 그 책무를 이행할 조직과 예산의 최소선은 정하지 않았다. 그 빈칸이 처음

으로 시험받고 있다. 세계의 흐름도 비슷하다.

원조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서 개발금융기관들은 서로 협력해 '단순하게'를 약속했고, 미국에서는 연방 재정의 변동성 속에 성과 기반 대출 펀드가 2년 넘는 모금 끝에 마감됐다. 공공의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 남는 것은 성과를 기록해 둔 조직과, 위험을 나눌 구조를 만들어 둔 금융이다. 경기도의 결정은 11월 도의회에서 바뀔 수 있다.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번 일은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가 법의 시대에 들어서며 처음 맞는 겨울이다. 이 겨울을 넘기는 방법은 지금 쓰는 숫자에 있다.

한국 임팩트 업계에 이번 주가 남긴 숙제는 하나로 모인다. 약속의 크기를 키우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장치와 그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기록을 먼저 갖추는 일이다.

본 자료는 문화미래기획자 정헌영이 연구용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년 11월 1주 · 전문가판